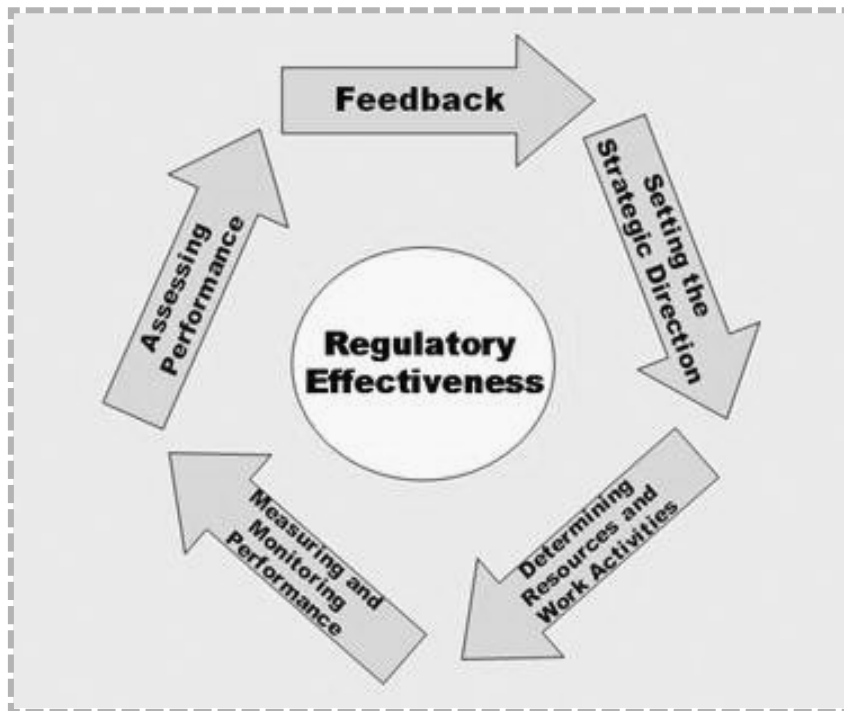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2008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이 6월 5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녹색연합, 월성원전 환경감시센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 교육원, 한전KPS, 한전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본 포럼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에서 기획 주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장현섭 박사과 박운원 박사가 진행을 담당하였고, 최광식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과 종합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특집은 포럼 발표 내용을 발표자의 집필로 구성한 것이다. (편집자)

2008년 제1회 원자력 안전포럼 종합 요약

1. 발표 주제와 내용

가. 공공 기관 성과 측정의 이론과 실제

- 한인섭/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성과 측정의 의의와 성과 지표의 개념과 유형, 성과 측정의 유용성 등 성과 측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공 조직의 성과 측정의 배경, 공공 조직의 특성과 성과 측정, 공공 조직 성과 측정의 한계 등을 설명하고 공공 기관 성과 측정을 위한 과제로서 성과 유형별 성과 측정 방법의 개발, 과정 지향적 성과측정 방법의 고려, 성과 측정의 다양성 제고, 상호 작용을 통한 신뢰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성과 측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활용할 것, 그리고 로드맵을 개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나.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 최광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원자력 안전 목표와 규제 목표를 검토하고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 논의의 배경, 정의, 규제 효과성 지표에 대한 OECD/NEA pilot project 수행 결과 소개, 미국의 사례, 종합 규제 평가 서비스(IRRS) 소개, 국내 현황들을 설명하였다. 안전 규제 효과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직접 지표와 여러 간접 지표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규제 효과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객관적인 규제성과 평가와 개선을 위해서는 IRRS의 수검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규제 완화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제 그리고 규제의 효과성

-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전력 산업 부문에서 규제 개혁 또는 탈규제 정책의 의미와 실재를 논하고 국내 원자력산업에 예상되는 탈규제 정책과 우려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 개선과 시민 참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규제 기관의 효과성이 규제 기관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규제 인력의 건전성 및 중립성에 달려 있으며 이해 당사자, 특히 시민 사회의 참여는 원자력 안전 규제 부문의 규제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앞으로도 규제 기관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혁에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총괄부장

원자력 이용 확대의 추세,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소개하고 원자력 선진국들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국내 원자력계 동향과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원칙들을 소개하였으며,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KINS 노력들로 PM 제도의 강화, 정기 검사 전담팀제 이행, 리스크 정보 활용 정기 검사 이행, 인적 수행도 검사 이행, PSR을 통한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 관리, 안전 규제의 품질 경영을 소개하였다. 향후 추진 과제로서 리스크 정보-성능 기반 규제 이행, 규제의 글로벌 컨버전스 대비, 운전 경험 반영 체제 구축, 원전 인적 오류 예방 대책 이행, 지식 기반 안전 규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마. 안전기술원의 성과 관리, 품질 경영 및 지식 기반 안전 규제

- 김용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략기획부장



KINS의 전략적 성과 관리 체제 도입과 비전 수립 및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균형성과표(BSC)를 활용한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선의 경과와 First KINS 2010 이라는 KINS 비전에 근거한 성과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설명하였다. 안전 규제 품질 경영과 지식 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바.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효과성 제고

- 박동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IAEA의 3대 원자력 안전 목표와 INSAG의 안전 원칙, IAEA의 기본 및 세부 안전 원칙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지 선정의 법적 근거와 인허가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법을 설명하였다. 그리

고 부지 사전 검토 제도의 도입, 독립된 부지허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2. 종합 토의와 평가를 통하여 얻은 결론

○ 본 포럼에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의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공공 부문의 성과에 대한 여러 이론 및 적용 현황,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과 관련된 국제동향들을 소개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 간에 상호 이해가 향상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한수원, KOPEC 등 피규제자 측에서 많은 인원(37명)이 참석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 효과성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규제 효과성에 대해 사업자 측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

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자의 규제 효과성에 대한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요원들의 현장에서의 업무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 확인되었다.

○ KINS는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으로서 BSC에 기반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바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 논의를 계기로 하여 공공 부문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이론과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 문제점들을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듣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성과 평가 및 관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KINS의 성과 관리에 대한 재점검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정부의 공공 기관 성과 평가의 방법론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바람직한 평가를 위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증이라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목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사업자 측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것의 어려움과 원전 기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시마다 향상된 기술기준을 끝없이 적용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의 고객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원자력 사업자가 규제 기관의 고객이라는 학자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목표가 국민을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민이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해야할 궁극적인 고객이며, 사업자를 고객으로 설정할 경우 국민을 위한다는 규제의 목표에 혼란이 발생하고 규제 기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제 정부 공공 평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KINS는 고객으로서 한수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수원을 KINS의 고객으로 공식화하면 KINS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실제 규제 업무 수행 직원들의 직무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제는 공공 부문의 기관으로서 현재 적용되는 성과 평가 항목이나 학문적인 수준에서 사회과학자가 보는 시각만으로 쉽게 결정지을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이 주제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함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며 그들 간의 이해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 규제에 의하여 그동안 원자력 사업자가 많은 편의를 보아왔으며 규제 개혁의 논의와 시행에 있어 원자력 안전 규제를 국내의 독점 혹은 과점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과 동일시할 가능성, 시장 진입 규제와 안전 규제를 구분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정책이 사업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향으로 집행될 가능성에 대하여 시민 단체 측의 우려가 표명되었다.

○ 원자력 안전 규제에 있어 정부 규제 개혁의 논의와 시행은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를 구분하여 효과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규제 효과성의 측정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이며 그 방법론 개발과 이해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광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